'9·1 감세' 지방 외면당했다

지방 소득·소비세 통한 재정 확보 방안 빠져

아파트 거주 요건 추가 … 투자심리 위축 불러

정부의 '9·1 세제 개편'이 광주·전남 등 지방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이 되레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 지역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에는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확보방안이 빠져있어 지방의 부동산 및 재정을 모두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지방 소재 주택 보유자가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는 비과세 기준을 기존 '3년 보유'에서 '2년 이상 거주'로 변경함으로써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침은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의 주택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을 사고 있다.

개편안에 비과세조건으로 '거주요건'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지방의 투자심리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개편으로 법 개정 이전에 준공이 안되는 아파트는 모두 강화된 거주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계약자들의 입장에선 분양 당시 없었던 거주요건이 새로 추가된 셈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 수완지구와 하남2지구 등 2년~2년6개월 전에 분양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 조항에 해당된다.

양도세 고가 주택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된 것도 수도권 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이번 개편의 혜택을 보는 6억~9억원의 전국 주택 37만가구 중 30만가구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반면 광주는 8가구에 그치고 있으며, 전남은 단 한 가구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세제 개편의 혜택이 대부분 수도권의 고가주택에만 돌아간 반면 지방은 되레 거주 요건만 강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은 지난 '8·21 대책' 당시 밝힌 전매제한 완화 등 지방 부동산경기 진작 방침과도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 지방 소득세 및 소비세 신설을 제외하고 교부세를 개편하지 않는 것도 지방재정의 열악한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 소득세 도입 등을 통한 자원의 재배분이 절실한 데도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그동안 대한상공회의소와 광주시 등 지방 광역지자체 등은 지방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 소득세 신설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소득세 등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일정한 세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징수한 금액을 일정비율에 따라 재배분하는 세제 도입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승구(왼쪽) 대주건설 사장이 2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08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이영희(오른쪽)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고용 촉진 업무유공자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있다.

대주건설,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2008 고용 촉진 유공 국무총리 표창 받아

대주건설(대표이사 이승구 사장)이 2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주최로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08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촉진 업무유공자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대주건설은 업무 성격상 장애인 채용기피가 만연한 건설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 고용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의 빠른 업무적응과 고충해결을 위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주건설은 지난 2006년 18명의 장애인을 신규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8명의 장애인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목표를 450%를 초과 달성했다.

또 국내 건설회사로는 최초로 지난해 장애인 체육단 발족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7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재활지원 뿐 아니라 대주문화재단을 통해 매년 2억원 이상을 불우청소년 등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매월 부서별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조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은행 - 전남도 지역개발 지원 협약

광주은행이 전남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지원에 나서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본격 뛰어들었다.

광주은행은 2일 전남도와 '지역개발 투자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단지 개발과 입주기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의 마케팅 및 정보 제공, 금융컨설팅, 투·융자지원 등에 공동보조를 취하게 된다.

특히 광주은행은 전남도가 추진중인 산업단지 개발 등 사업 지원 및 투자 유치사업의 마케팅·컨설팅·금융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등 각종 개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기업 분쟁 해결 '광주·전라 중재센터' 개소 대한상사중재원 광주·전라중재센터가 2일 광주상공회의소 1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광주·전라중재센터는 기업간 민·상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광주상의 제공〉

광주 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 준공

면적 7,403㎡, 지상 4층 규모

가전 분야 기술 개발 지원

광주시의 주력사업인 디지털 가전분야 기술개발과 디지털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컨버전스 부품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시는 2일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해 서영주 전자부품연구원장 등 전자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디지털컨버전스 부품센터'(이하 부품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부품센터는 전체면적 7천40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됐다.

디지털 컨버전스(Digital Convergence)는 기존의 디지털 기기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형태의 융합 기술로 카메라와 MP3 기능이 결합한 휴대전화와 방송과 통신이 결합한 DMB 등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전자부품연구원(KETI)이 운영을 맡고 있는 디지털 가전 개발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또 디지털 부문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중소기업에 첨단장비 지원, 개방형 연구실과 창업보육실 등을 제공한다.

시는 첨단과학산단 내에 있는 부품연구원이 기술개발·이전을 맡게 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디지털 가전 사업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광주·전남 제조업체 경영 악화

지난해 부채비율 111.4%달해 … 차입금 의존도 늘어

지난해 광주·전남의 주요 기업들은 부채가 늘어나고 수익성은 떨어지는 등 경영실적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기업들은 제조업 및 건설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가 상승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내놓은 '2007년 광주·전남지역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제조업체의 부채비율은 111.4%에 달했다.

이는 2006년(109.2%)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재무구조가 1년 전보다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실제 이들 제조업체의 자기자본비율은 2006년 47.8%에서 47.3%로 0.5%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차입금의존도는 26.9%로 1년 전(24.6%)보다 2.3%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석유정제업의 부채비율이 110.6%에서 168.5%로 무려 57.9%포인트나 뛰었다. 또 자동차 부문의 부채비율도 146.9%에서 171.2%로 24.3%포인트나 상승하는 등 지역 주력 업종의 재무구조 악화가 두드러졌다.

반면 지역 업체들의 수익성은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대기업과 내수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 억대농가 '창조농업인회' 본격 활동

전남지역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 모임인 '(사)창조농업인회'가 2일 구례 송원리조트에서 첫 연찬회를 갖고 전남농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짐했다.

'창조농업인회'는 이날 장형태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0여명과 박준영 도지사, 박인환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내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 865명 가운데 608명이 참여해 '부농을 일구는 사람들'로 출발했던 '창조농업인회'는 지난 4월 이사회 결의로 모임 명칭을 변경하고 지난 7월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출범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